

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시	2020. 5. 11.(월) 총 9매(본문 6, 참고 3)	
담당 부서 시설안전과	담당 자	· 과장 김태곤, 서기관 정덕기, 사무관 성언수 · ☎ (044) 201 - 4598, 4990, 4997	
보 도 일 시		2020년 5월 12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5. 12.(화) 12:00 이후 보도 가능	

세계 일류의 기반시설 관리로 강한 경제·고품격 생활안전을 실현하겠습니다

-12일 ‘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(’20-’25)’ 국무회의 의결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5월1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5차 국무회의에서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(’20~’25)* (이하 “기본계획”)을 심의·의결하였다고 밝혔다.

* 기반시설관리법 제8조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, 제1차 계획은 법의 시행에 맞추어 신속한 기본계획 수립·시행을 위해 법 시행(’20)을 포함하여 6년

○ 이번 기본계획은 기반시설관리법 제정(’18.12, ’20.1 시행) 전후에 발생한 KT 통신구 화재,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에 따라 범부처 전담조직(TF)*을 통해 마련되고 발표된 「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 대책(’19.6)」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였다.

* 국토부 제1차관(단장), 기재·과기정통·행안·농식품·산업·환경·해수부 실·국장급

□ 이번 기본계획을 통하여 7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시설의 노후화*로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**에서, 기반시설 관리정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.

* 현재 기반시설 중 30년 이상 경과된 비율은 18%, 10년 후에는 40% 수준으로 증가 예상

** 과거 5년간 기반시설 관리 투자 규모(국가, 지자체, 공공·민간):(’15) 9.1조→(’16) 9.2조→(’17) 10.1조→(’18) 11.0조→(’19) 12.6조

□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‘세계 일류의 기반시설 관리로 강한 경제, 고품격 생활안전 실현’이라는 비전 아래,

- 1)기반시설 관리 거버넌스 정립, 2)기반시설 안전등급을 “미흡” 및 “불량” 없도록 관리, 3)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을 통한 일자리 확대, 4)선제적 투자를 통한 미래부담 경감을 4대 목표로 제시하였다.

비전	세계 일류의 기반시설 관리로 강한경제, 고품격 생활안전 실현	
목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새로운 기반시설관리 거버넌스 정립 ◆ 전체 기반시설 안전등급을 “미흡” 및 “불량” 없도록 관리 ◆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을 통한 일자리 확대 ◆ 선제적 투자를 통한 미래부담 경감 	
추진 전략	【관리체계】 선제적 관리체계 마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종합적·선제적 유지관리 계획 체계 정립 • 유기적 유지관리 이행체계 구축
	【관리대상·방식】 생활안전 관리수준 상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반시설 안전·유지관리 합리화 •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• 지하 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
	【기술·산업 육성】 스마트 유지관리를 통한 산업육성 추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데이터 기반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 •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·활용 • 유지관리 일자리 개선 및 산업성장 지원
	【투자·재원】 선제적 투자 및 투자재원 다각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 강화 • 다양한 안전투자 자원조달 방안 마련

	【 현 재 】	【 변 화 】	
변화 모습	안전점검	보이는 위험만 처리	잠재된 위험도 발굴·해소
	투 자	신규건설 위주 투자	노후 시설 선제적 투자 강화
	관리체계	시설별 사후 위주 관리	총체적·선제적 관리
	관리방식	경험의존 예측·수동 관리	빅데이터 기반 예측·자동 관리
	정 보 화	기관별 분절적 관리	플랫폼을 통한 정보 통합관리
	기술·산업	인력 중심의 산업	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

□ 이번 기본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.

① 종합적·선제적 유지관리체계 구축

- 시설별로 산발적으로 수립되었던 15종 기반시설*의 유지관리계획을 「기본계획(국토부, 5년 단위)-관리계획(관리감독기관, 5년 단위)-실행계획(관리주체, 1년 단위)」의 입체적·종합적 관리체계로 개편하고,

< 기본계획 대상 15종 기반시설 종류 >

대분류	소분류	기반시설
중대형 SOC(7)	교통시설(4)	도로·철도·공항(국토부), 항만(해수부)
	방재시설(3)	댐(환경·산자부), 저수지(농식품부), 하천(국토부)
지하시설물(8)	지하관로(5)	상수·하수도(환경부), 가스·열수송·송유관(산자부)
	지하구(3)	전력구(산자부), 통신구(과기정통부), 공동구(국토부)

- 시설별 상이한 관리기준도 공통된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기준 설정을 통해 상향 일원화하여, 관리주체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촉진한다.
- 아울러, 관리감독기관 간 유기적 협력과 효율적 이행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('20~)을 비롯해 국토안전관리원* 설립('20), 민·관 합동 기반시설관리협의체 구축('20~) 등 이행 조직도 정비한다.

* 건설안전, 시설물 유지관리,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운영, 전문 인력 교육 등의 업무를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지원

② 생활안전 관리수준 상향 및 안전사각 지대 해소

- 모든 기반시설의 개별 법령과 규정에서 정밀점검 및 안전등급 부여를 의무화('20~'21)하여, 경과연수가 아닌 관리 상태를 기반으로 기반 시설 안전등급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유지하고,

* 관리감독기관(6개 중앙부처, 17개 광역지자체)은 최소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하고, 주기적으로 안전등급을 평가하여 이력을 관리

- 소규모 취약 시설물 중심으로 센서 부착 등 정보통신기술(ICT) 기반 원격 모니터링 기술을 도입('21~)하여 관리를 강화한다.

- 준공 후 20년을 초과하는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(매 5년), 30년 이상 경과한 지하시설물은 성능개선 또는 교체 원칙*에 따라 관리('20~) 하고, 주요 통신·전력 및 수도·가스관 등의 이중화·네트워크화 ('20~'25, 수도 '30)를 통해 사고 발생 시 광역적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한다.

- * 시설 특성, 안전도, 사고발생 시 영향, 주변 시설물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, 관리계획 및 최소유지관리·성능개선 기준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이 원칙 설정

- 또한, 교량·터널 등 주요 시설의 안전정보를 공개('20~'21)하고, 전국 단위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(~'23), 지하지도 정확성 검증('20~) 등 기반시설 관리정보체계도 강화한다.

③ 스마트 유지관리 기반 구축과 관련 산업 육성



- 우선,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인프라 총조사*를 통해 시설물 상태 등을 DB화('20~'24)하고,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취약지역·시설요소를 과학적으로 규명한다.

- * 인프라 총조사를 바탕으로 시설물별 안전·성능 상태 등을 정량화한 「기반시설 건강진단서」를 발행하여 정책 지원 및 홍보에 활용('25)

- 노후SOC 등 기반시설에 사물인터넷(IoT)·드론·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지관리 시스템도 본격적으로 구축한다. 이에 따라 관련 연구과제(R&D)*를 확대('20~)하고,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진단·유지관리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, 유지관리 새싹기업 활성화를 통해 신규인력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.

* (기반시설 토탈케어 기술 개발)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하시설물과 지상시설물을 아우르는 모니터링, 진단, 평가, 예측, 장수명화 등 기술개발

- 또한, 기반시설 「유지관리 산업 해외진출 중·장기 로드맵('24)」을 통해 선진국·개도국 맞춤형 진출 전략과 지원체계를 마련한다.

④ 선제적 기반시설 안전투자 및 투자재원 다각화

- '20년부터 '25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13조 원 내외*(국비 5조원 내외, 지자체 5조원 내외, 공공·민간 3조원 내외)를 투자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실현한다.

* 기본계획 수립 이전 5년간('15~'19) 투자비용(연평균 10.4조원) 대비 약 28% 증가

- 국가·지자체는 관리주체에 비용을 출자·출연·보조·융자 등으로 지원*('20~)하고,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, 기반 시설 유지관리·성능개선 투자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.

* 다만, 민간관리시설은 융자로 한정('20.4, 기반시설관리법 개정)

- 또한, 관리감독기관은 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민간자본 활용* 등 추가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('21~)하고, 기반시설관리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「기반시설관리 종합투자계획」을 수립('21~)한다.

* 신규 개발사업과 시설개량을 묶음사업(bundle)으로 하여 민간자본 유치 등

-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은 **기반시설관리위원회**(4.29, 총리 주재)와 **국무회의**를 통해 심의·의결되었으며, 각 부처와 광역지자체 등 관리 감독기관의 관리계획을 통해 구체화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“올해는 기반시설 관리의 원년으로 기반시설관리법 시행,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, 더욱 중요한 것은 계획의 이행을 통해 국민이 기반시설을 **안심하고 안전하게**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”이라고 말하며,
 - “해당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**촘촘한 관리 계획 수립**을 통해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의 **실효성을 높여줄 것**”을 당부하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시설 안전과 성언수 사무관(☎ 044-201-499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세계 일류의 기반시설 관리로 강한 경제, 고품격 생활안전 실현

제1차 기반시설 관리기본계획('20~'25)

기반시설 지속가능성
확보를 위해 스마트 유지관리 기반을
구축하겠습니다.



4대 전략 10대 핵심 과제

전략 1

선제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

- 종합적·선제적 유지관리 계획 체계 정립
- 유기적 유지관리 이행체계 구축
- 관리강화 체계 확대방안 마련



전략 2

생활안전 관리수준을 상향시키겠습니다

- 기반시설 안전·유지관리 합리화
-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
- 지하공간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



전략 3

스마트 유지관리를 통한 산업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

- 데이터 기반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
-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 및 활용
- 유지관리 일자리 개선 및 산업성장 지원



전략 4

선제적 투자 및 투자재원을 다각화하겠습니다

-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 강화
- 다양한 안전투자 자원조달 방안 마련



□ **관리체계**

- **(적용대상)** 국토계획법에 따른 **기반시설 46종** 중 국가·지자체 등이 관리하는 공공 기반시설로서 **시행령***에서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시설
 - * (안) 도로, 철도, 항만, 공항, 하천시설, 댐, 저수지 등 SOC 7종
수도, 하수도, 전기, 가스, 난방, 통신, 송유, 공동구 등 지하시설물 8종
- **(계획수립)** 5년 단위 **기본계획**(국토부장관), **관리계획**(관계장관/시도지사)을 수립하고 **기반시설관리위원회**(위원장: 국무총리)가 이를 심의
 - * 최소유지관리기준과 성능개선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
- **(관리주체)** **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의무 부여**

□ **재원대책**

- **(정부)** 국가·공공기관·지자체에 대한 유지관리·성능개선비 지원
- **(관리주체)**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**성능개선*충당금**을 적립
 - * 기본법에서는 일상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구분하였으며, 성능개선은 기반시설의 주요구조부를 수선·변경하여 가치와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을 의미
- **(사용자)** 사용료의 **10%의 한도** 내에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, 실제 **부담금 부과율**은 시설별 **개별법에서 구체화***하도록 규정
 - * 예) 지하철 요금에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법을 개정하여 부담금 부과금액·징수절차 등을 정하고, 부담금관리법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함

□ **재정지원**

- **(지원대상)** 국가나 지자체가 **건설당시 비용을 부담한**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이 수립된 시설 (성능개선비 지원은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필요)
- **(지원원칙)** 지원비율은 **보조금법**에서 정하되, **유지관리비는 증액분의 50%, 성능개선비는 충당금 적립액을 한도로 지원**
 - * 유지관리비는 올해 100억원인데 내년에 120억원이 될 경우 국가가 10억원을 지원
 - ** 성능개선비는 지자체가 100억원을 적립할 경우 국가 지원한도도 100억원

운영근거

- 기반시설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정부위원과 민간위원*으로 구성, 기반시설 관리 추진방향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심의·의결

* 위원장(국무총리)을 포함하여 30인 이내(정부 9명, 민간 20명)

운영체계

- (위원 임기) 1기 위원회는 '22.4월까지 2년간 활동
- (개최 주기) 분기별 1회 정례 개최하되, 현안 발생시 수시개최
- (분과위 운영)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4개 분야별로 분과위* 설치

* (4개분야 분과위원회) 총괄·교통시설·지하공급시설·방재시설 분과위원회

주요 심의사항

- 기반시설 관리 정책 및 제도의 기본방향
-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
- 최소유지관리·성능개선 공통기준
-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
- 국제협력, 기술개발,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 등에 관한 사항
-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와의 정책 조정